

##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강조사항

### 1 산불특별대책기간 개요

#### □ 운영 개요

- (목적)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인명 및 산불피해 최소화
- (기간) 2023.3.6. ~ 4.30. / 56일간
- (대책) “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(23.1.6)”에 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내용 포함  
금번 대책은 기간 내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사항만 강조

### 2 여건 및 전망

#### □ 기상 여건

- 지난 한달간(2.4~3.3)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평년(30년 평균)대비 매우 적고 건조특보가 지속 발효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음  
\* (강원) 평년 35.7mm, →'23년 10.5mm(▲71%) (경북) 평년 30.7mm →'23년 16.5mm(▲46%)
- 기상청 3개월 기후전망\*은 평년과 비슷하여 건조할 것으로 예상  
\* 3월 : 평년(강수량 : 42.7~58.5mm, 기온 : 5.6~6.6°C)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50%  
4월 : 평년(강수량 : 70.3~99.3mm, 기온 : 11.6~12.6°C)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40~50%

#### □ 산불발생 현황 및 전망

- 최근 10년(13~22년)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%인 15건이 3~4월에 발생
-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(10년 평균) 중 발생한 산불은 143건으로 연간 27%, 피해면적은 621ha로 연간 18% 차지  
\* 발생원인은 소각산불 35%, 입산자 실화 26%, 담뱃불 실화 6% 順
- 코로나 이후 야외활동의 증가, 영농기 불법소각으로 산불발생 위험성 증가 전망

### 3 특별대책기간 중점 추진대책

#### □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한 산불방지 대응태세 준비

-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상황관리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
-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을 산림재난통제관으로 격상하고 근무인원 증원을 통한 비상근무 강화
-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별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\* 이행 철저  
\* 산불발생취약지 감시인력 배치,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·배치 등
- 자치단체장 등 산불방지 대응상황 주기적 점검 및 관계자 격려

#### □ 산불 예방·감시 강화로 소각산불 등 발생 최소화

-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 전면 금지('22.11월)로 시·군 단위 합동점검단(산림·농정·환경)을 운영하여 불법 소각행위 등 단속·처벌\* 조치  
\* 불법소각 행위는 과태료(100만원 이하) 처분하고 산불을 낸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법처리(실화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
- 산불감시 카메라(1,448대) 외에 산불위험이 높은 동해안은 인공지능(AI)과 산불 감지센서(연기·불씨)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ICT 플랫폼 기반 감시체계 확대
- 야간 소각 방지를 위해 감시원 등 근무시간 조정 운영(9시~18시 → 10시~20시)
- ‘산불특별대책기간’(3.6~4.30 운영) 동안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 취약지역 고정배치와 주말(휴일) 산불예방 활동 추진  
※ 강풍특보 발효 전후 시·군·구 공무원 집중 배치(산림청 주말 기동단속 추진 계획)

#### □ 산불 지휘체계 확립으로 체계적 산불대응 추진

- 산불발생 초기 단계부터 산불현장 통합지휘권자(자치단체장 등)가 현장 지휘
- 산불대응 단계\*에 따라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동원하고 산불현장통합 지휘본부 구성 및 현장 브리핑 정례화로 대응 상황을 적극 공유  
\* 초기대응(5ha 미만), 1단계(5~30ha), 2단계(30~100ha), 3단계(100~3,000ha), 4단계(국가 총력대응, 3,000ha 이상)로 구분·운영

## □ 선제적 산불진화 대응으로 국가 중요시설 보호

- 원전, LNG,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\* 인근 산불발생 시 실시간 상황·공유  
\*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국가 중요시설 위치정보 등을 탑재(146천개소)하여 관리
- 국가 중요시설(에너지 시설, 송전탑, 송전선로 등)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우선 진화 및 진화시 산불지연제(리타던트) 적극 활용
- 중요시설은 자체시설 방호를 위한 진화장비 점검 등 사전대응 준비

## □ 지상·공중 입체적 대응으로 초동진화 역량 강화

- 산불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(435명), 공중진화대(104명)는 도시·야간·대형산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운영
- 산림청·지자체 임차헬기에 대한 골든 타임제 운영하고 대형산불 위험성이 높은 동해안지역 진화헬기 전진배치(11대)
- 산불위험시기는 산불발생 시 소방, 군 등 유관기관 헬기 조기 투입  
\* 특히 군이 보유한 진화헬기는 강풍특보 발효시에는 즉각적 투입 요청
- 야간 이동정비팀과 정비차량 운영으로 헬기 가동률을 제고하고, 가뭄 대비 진화수 확보를 위한 담수지(3,608개소) 관리 및 이동식 저수조(45세트) 운영
- 고성능 산불진화차(23년 봄철 9대), 드론산불진화대(10개팀) 및 이동형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 진화 추진

## □ 산불진화 인력·장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
- 산불진화 인력은 산불 현장에서 안전 확보를 최우선\*한 진화업무 수행  
\* 개인장비 규격화, 안전교육 의무화, 휴식 보장, 산불규모에 따른 구급인력 배치 등
- 헬기 안전사고예방 및 공중산불진화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 지휘통제관(ACC) 및 지상안전통제관(GSC) 제도 운영
- 산불확산 위기상황 발생시 대국민 신속 전파 및 주민대피 이행 철저  
※ 인명 또는 재산피해 예상시 대피권고 및 대피명령 등 재난문자 적기 송출

## □ 소각 등 주요 발생 원인별 '산불조심' 홍보 추진

- 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소각금지 협조 요청 및 산불취약지 소각금지 및 처벌강화 현수막 설치로 경각심 고취
- 소각금지 마을 방송, 차량 이동방송 등으로 지속 홍보하고 강풍특보 발효 및 주요 위험시기(청명·한식 등)에 재난문자발송(CBS) 등으로 적극 안내
- 유관기관 활용 화목보일러 및 작업장 화기 관리 주의사항 등 홍보 협조
- 산불방지 방송 광고 및 언론 기고, 기획보도 등을 통한 언론홍보 추진
- 인터넷포털, V비즈링, 네비게이션 모멘티 음성광고 등 다양한 홍보 추진

## 4 유관기관 당면 협조사항

- (국방부) 산불위험시기에 화기별 사격훈련 통제지침 준수, 산불발생 시 진화인력 및 헬기 긴급 지원 등
- (행안부) 특별대책기간 중 마을별 재난안전 통신망 등을 활용한 소각금지 홍보 방송 및 반상회 등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협조
- (농식품부, 환경부) 시·군단위 농정·환경·산림부서의 합동점검단 운영 및 마을이장단 산불예방 홍보문자 전송 협조
- (산업부) 국가 에너지시설 산불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
- (경찰청) 방화범 등 산불 가해자 검거, 산불현장 교통통제
- (소방청) 산불발생 시 민가보호 및 주민대피, 산불진화 용수 공급 등
- (농진청) 농업인 및 귀농·귀촌자 교육 시 산불예방·대응 교육 실시
- (기상청)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발생 시 실시간 현장 기상정보 제공 및 강풍(양간지풍) 시 산불위험 언론 등 홍보
- (문화재청) 산불발생 시 문화재 주변 소화시설 등 예방시설 이용 신속 대응 및 중요 문화재 대피

